

“지역비하 발언, 사과로도 세척 안돼”

전북애향본부, KBS 소속 기자 “전주소·돼지우리 냄새 난다” 발언 관련 KBS 비판 전북기자협회, KBS에 “공영방송에서 씻지 못할 상처 입혀…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KBS 소속 기자가 “전북 전주소·돼지우리 냄새 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북애향본부가 KBS를 강력비판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이전설 및 공영방송에서의 전북비하 발언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전설과 지역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KBS 현직 기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찬반 대화 중 전주를 두고 소 배새,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고 한 발언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전설의 진원자인 대동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공영방송의 해당 기사는 사과했지만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 리 만무하고 특정지역 비하발언이 사과한다고 해서 세척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대응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전북애향본부는 사실관계를 끝까지 추적,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전북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북기자협회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KBS 본사 한 기자가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력 유출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

정지역인 전북 전주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됐다”며 “발언의 전후 맥락이나 취지를 차치하고, 공영방송 기자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인 솔자리 농담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주 시민 더 나아가 전북도민들의 질감감이 수십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과 신뢰를 기치로 내건 공영방송에서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전북도민에게) 입혔다”면서 “해당 기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공영방송 KBS의 생방송 위로 비롯된 것이라 보고,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자들 사전에 검증하지 못

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크게 사과할 점이라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기자협회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사명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KBS를 포함한 전북기자협회 300여 회원들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지 않도록 KBS에 즉각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강박합니디’에 출연한 KBS 소속 A기자가 진행자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의 서울 이전 찬반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불거졌다.

당시 A기자는 “제 친구 중에도 운동역(자금 담당 인력)으로 있다가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며 올라온 친구가 있다”고 발언했다. “여기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라며 “지방은 이런 고부가지치 산업은 절대 못 가지느냐 이런 건 다 서울만 가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 유서에 이재명 언급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 조사 억울하다”고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져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초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씨가 유서에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9일 자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의 서울 이전 찬반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전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 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다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그는 퇴임 직전인 지난해 12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영상녹화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성남 시장이었던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동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 없이 시인 촉구하던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 등에 대해 파악했으며, 이후에는 별도 출석요구나 조사가 없

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김성태 전 성남을 그들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인물로 알려져 최근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올해 1월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쌍방을 그들 전 비서실장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씨가 조문을 왔으며, 명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쌍방을 그들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 차례 검찰 조사 등을 받으며 전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전씨가 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씨는 유서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했으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유서의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료 대응 세미나

국회 법제실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10일 군산산업진흥원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료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군산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해제 이후에도 재정과 행정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차별을 위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군산 경제의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신영대위원이 ‘업위기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유이선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산업위기지역 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국회 법제실 법제관 및 군산시·자동차융합기술원·삼원중공업·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의 토론도 진행됐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항일지리 등을 통해 군산의 산업과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계도를 올려서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료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4·5 전주를 재선거 후보자 ‘말·말·말’

“노인 치매문제,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김호서 예비후보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가 사회문제가 된 노인 치매 문제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의료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2,213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만2,844명에 이르는 등 치매 유병률이 높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류와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한 노인·치매 돌봄 통합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통해 기존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예방 서비스는 물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강화 등 치매 사각지대 해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주시가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치매안심에 비해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 것을 감안, 치매를 국가가 지속 책임지도록 전문인력 배치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 강화와 함께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자에게만 지원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폭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치매상담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노인 치매 문제는 하루라도 앞당길수록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김호서민의 노인 의료복지정책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행자위, 잼버리 부지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10일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했다.

이번 추경은 작년 국회 단계에서 증액 확보한 잼버리 관련 국비 예산에 더해 매칭되는 도비를 편성하여 신속한 교부로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안전 분야를 보강하는 등 원활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잼버리 경관 센터,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직소전 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대회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산경위, 첨단벤처단지 등 찾아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10일 (사)캠틱종합기술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 방문한 (사)캠틱종합기술원은 1999년 12월,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24년 동안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기업과 같이 성장해 왔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탄소융복합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지 의정을 계기로 농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도내 기업 육성 및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교육위, 미래교육연구원 등 방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과 수장을 방문하여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공동으로 미래교육연구원 전자철관 사업과 활용도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기기 활용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용태(진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해야 하는 수업과 수업 준비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면서 “이번 전자철관 도입 교육현장에 적용되면 수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자철관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전자철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텐츠가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한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동부권 특화발전 도·의회 공조해야”

윤정훈 도의원, 자원·인프라 활용 적극 행정 대응 요구

전북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확대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윤러 동부권 내 6개 시·군 모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시·군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동부권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전북도 실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기)이 지난 8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다. 윤정훈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동부권발전사업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300여을 지원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에는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전라북도 예산이 매년 5천억에서 1조 원 가량 증가해준 것에 비하면 60억 증가분은 턱무늬없는 수준이며, 이마



준으로 대비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동부권 지역 의원님들과의 면담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윤정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관리를 취해야 한다”는 적극 행정을 요구하며,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좀 더 포지티브한 평가제도 도입을 당부했다.

이어 “산과 하천이 아름다운 동부권에는 민족의 명산인 덕유산 지리산, 마이산 등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000억 규모의 투자로 구축된 덕유산 리조트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립태권도원 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동부권 자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무주를 통해 유입되는 영남지역 관광객 유치 등으로 동부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전북도 관련 부서의 동부권 지역 방문이나 도의회와의 공조 및 실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